



# 낙태법, 독일 통일의 난제 중 하나

## 동독 주요 정당, 진보적 낙태법 유지 위한 투쟁 다짐

박희라/자유기고가

오는 10월3일 동서독 통합과 12월2일 전독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동·서독이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 중 하나가 낙태법을 둘러싼 논쟁이다. 동서독 국민들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이한 낙태법은 특히 동독여성들 사이에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 동독 여성들, 통일 후 낙태 수술 금지될까 가장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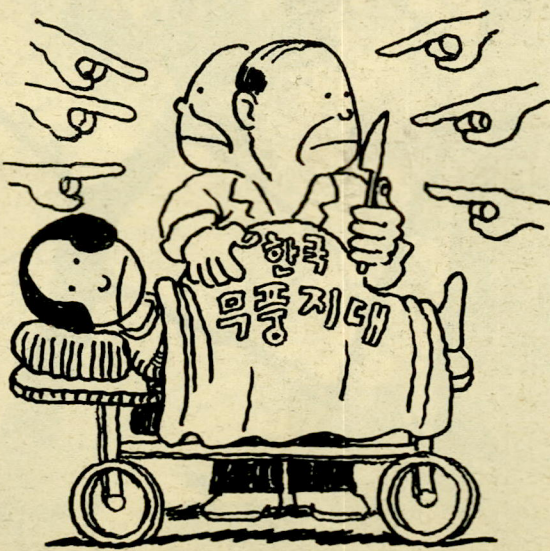
이제까지 동독법률은 12주 이내의 태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서독에서는 임신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것일 경우, 출산

이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사회·경제적 곤경을 유발시킬 경우에 한해서만 12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독여성들은 통일 후 자유로운 낙태수술이 금지될 것을 무엇보다도 우려하고 있으며 동독 주요 정당들도 통일 이후 진보적 내용의 낙태법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낙태를 둘러싼 분쟁은 서독 국민 내에서도 그리고 서독 주요 정당들 사이에서도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다.

지난 27일 서독의 사민당은 헬무트 콜 총리의 기민당 연립정



부가 제시한 동·서독 법률통합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통합안의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낙태법과 관련된 조항이다.

여기에 따르면 10월3일 동서독이 통합된 이후 동독으로 가서 낙태수술을 받는 서독여성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민당은 서독의 엄격한 낙태제한 법률이 동독영토까지 확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보수적 콜 정부가 이번 법률조항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사민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통과에 필요한 의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이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10월3일 양독의 통합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서독법률이 동독의 일상에까지 그대로 침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동독 드 베지에르 총리는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통일의 과정이 마치 이웃 부자 나라에 그대로 흡수돼서 그들 자신이 전혀 새로운 경제·법률 체제에 순응해 나가야만 한다는 생각은 없을까 하는 동독 여성들의 불안감을 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양독의 정치인, 여성단체, 정부관리들은 벌써 몇달째 통일독일의 가장 이상적인 낙태법률은 어떤 것이 돼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논쟁하고 있지만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전망하기란 쉽지 않다.

### 전세계에 번지는 낙태 논쟁, 한국만 '무풍지대'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 동·서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전세계가 과연 낙태를 합법화시켜야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사생결단이라도 벌일 듯이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며 시위도 끊이지 않는다. 얼마전 미국의 진보적 대법원판사 윌리엄 브레넌이 사임하고 그 후임에 데이비드 수터 판사가 지명됐을 때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그가

낙태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가였다. 아직 그의 입장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9월2일의 판사직 임명 청문회에서 그는 미원 사법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이 문제에 관해 질문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답변에 따라 그의 대법원판사직 임명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

조지부시 미 대통령이 이처럼 낙태문제에 관해 입장이 불분명한 수터 판사를 대법원판사직에 임명한 것 역시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어느 한쪽의 비난공세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새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신의 의지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없애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생명중시(pro-life)" 보수주의자들이나 상황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선택우선(pro-choice)" 자유주의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가 있으며 어느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에 낙태합법화 논쟁의 어려움이 있다. 당분간 낙태를 둘러싼 찬·반 공방은 쉽게 사그라들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처럼 세계각국이 낙태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유독 한국만은 '무풍지대'처럼 낙태의 천국이 돼 있다는 사실이다.

10대의 청소년까지 낙태수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월드위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낙태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난 79~85년의 출산율이 5분의1은 높아졌을 것'이라면서 낙태라는 수단이 산아제한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혼여성치고 두세 번의 낙태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낙태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최소한 사회전반의 관심만이라도 부각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 교통사고 국가라는 오명에 더해 최대 낙태국가라는 부끄러운 이름마저 얻게 될지 모른다.